

올 추석도 요양병원은 ‘대면면회 금지’

집단감염 규모, 선제 검사 양성률 등 고려 내년 상반기까지 요양병원 환기기준 마련

코로나19 유행의 여파로 올해 추석 연휴에도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면회는 불가능하다.

박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추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6차 유행이 발생하자 고위험군이 밀집한 감염취약시설 내 전과 차단을 위해 지난 7월25일부터 대면 면회를 금지하고 종사자 대상 선제 검사를 강화해왔다.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7월 4주 집단감염 165건, 평균 환자 수 248명에서 8월 3주엔 45건, 426명으로 집단감염 건수는 줄었지만 감염 규모는 증가했다.

선제 검사 양성률은 7월 3주 0.65%에서 8월 2주 1.02%로 늘었다.

정부는 집단감염 규모와 선제 검사 양성률 등을 고려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대면 면회와 필수 외래 진료 외 외출·외박 제한, 종사자 선제 검사 등 현행 방역 수칙을 유지한다.

박 반장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집중관리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라며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인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실적을 보면 17개 시도 204개 의료기관에서 251개 팀이 운영 중이며 지난 22일 기준 2392명 진료, 315명 입원, 2015건 처치 등으로 나타났다.

월별 출동 건수는 4월 193건에서 8

월엔 22일까지 96건이며 정선시설 의료전담기동반은 12개 시도에서 25개 의료기관, 27개 팀이 운영 중이다.

요양시설 의료 기동전담반은 시군구별 1개 이상 운영을 목표로 지속 확충하고, 계약의사,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등 기존 진료체계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먹는 치료제 활성화를 위해 처방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증 완화를 위한 처방도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

박 반장은 “초기에 촉탁의가 코로나19 치료에 대해 처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산발적으로 1~2명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촉탁의도 처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내놓은 상태”라며 “요양시설 확진자가 병원으로 갔을 때 보호해 줄 수 있는 간병인도 파견할 수 있는 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감염취약시설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요양·정신병원 감염관리요원을 통해 감염관리자를 지정하

고, 종사자 대상 감염관리교육도 추진한다.

환자 발생 상황별, 시설유형별 시나리오 기반 현장 모의훈련도 8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박 반장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나머지 어르신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게 강조되는 부분”이라며 “실제로 모의훈련을 진행하고 발생, 후송, 관리까지 빈틈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아울러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환기기준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협회와 협조 등을 통해 수시 환기 등을 권고한다.

정부는 향후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요양병원 환기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반장은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대응체계를 내실화하고 기존 대책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나주경찰, 하계 방학중 교육청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나주경찰서(서장 박상훈)는 지난 19일 하계 방학중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및 적극적 예방을 위한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을 펼쳤다.

나주=송준표기자



강진경찰, 찾아가는 현장교육 실시

강진경찰서(서장 위동섭)는 지난 19일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강진군 아동보호 복지시설인 '자비원'에 진출하여 저녁 나눔 봉사 활동에 참여하였다.

강진=김영일기자



광주 남부소방, 골든타임 확보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시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이정자)는 전통시장(무등시장·봉선시장)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여수소방,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캠페인 실시

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화재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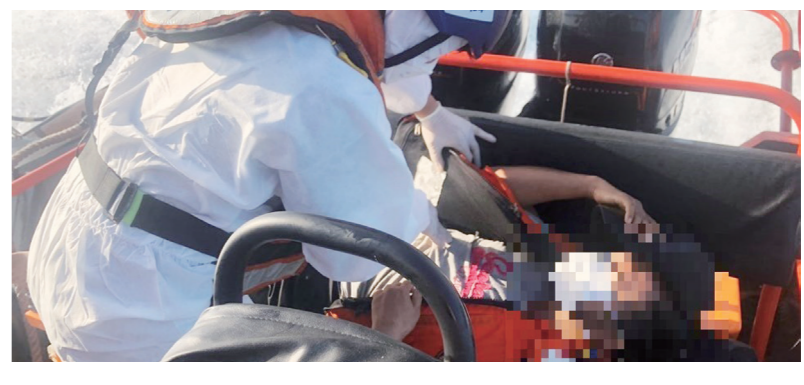
여수=기동취재본부



광양소방, 선박화재 대응 유관기관 합동소방훈련 실시

광양소방서(서장 서승호)는 광양의 선박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9일 광양시 도촌포구에서 가상 선박화재 발생에 따른 유관기관별 초기대응 및 화재진압 등 합동소방훈련을 전개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완도해경, 뱀에 물린 섬마을 주민 등 긴급이송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는 지난 19일, 전남 완도군 노화도에서 뱀에 물려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발생해 긴급이송에 나섰다 밝혔다.

완도=기동취재본부

법원 “사유 서면 통지 없이 생계급여 지급 중단은 위법”

광주 광산구 기초생활 조건부 수급자에게 중단 안내문 통지 안 해

광주 광산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어기고 수급자에게 생계 급여 지급을 중단했다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법원은 지급 중단 사유를 밝혀 서면 통지해야 하는 법을 어긴 하자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복지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산구가 A씨에게 한 생계 급여 중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19년 8월부터 1년 동안 광산구로

부터 생계 급여를 지급받았다.

A씨는 자활 사업(저소득층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였다.

광산구는 2020년 8월 25일 자활 사업 기간이 끝난 A씨에게 “계속해서 생계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자활 계획 수립 상담 뒤 사업을 이행해야 한다”고 전화로 알렸다.

자활 계획 수립 상담 안내문은 A씨에게 송달되지 않았다.

광산구는 이후 A씨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살지 않는 사실을 확인했다. 광산구는 거주지 불명을 이유로 A씨에게 2020년 9월 생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A씨는 “기초생활보장법은 거주지 불명을 급여 중지 결정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중지 처분 사유를 밝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며 처분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기초생활보장법 제29조 2항은 급여의 종류·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산출 근거 등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서면으로 수급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0조는 급여를 중지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산구의 생계 급여

임형택기자

‘추석 성묘철’ 예초기·벌쏘임 사고 주의보

예초기 작업 중 골절·베임 등 많아



추석 벌초·성묘철 예초기 사고와 벌쏘임을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예초기 작업 중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주로 다치는 상해 부위로는 다리(46.2%)가 가장 많다. 보호 장갑을 끼지 않고 예초기를 조립하거나 칼날에 낀 이물질 제거를 하려다 팔(23.1%)을 다치는 경우도 많다. 몸통과 머리를 다치는 비율은 각 7.7%씩이었다.

상해 증상별로는 골절(30.8%)이 가장 많았다. 칼날 등에 의한 베임(23.1%), 근육과 인대파열(15.4%), 절

림(7.7%), 신체 절단(7.7%) 등이 뒤를 이었다.

2017~2021년 5년간 벌에 쏘여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6만3174명이었다. 특히 벌쏘임 사고는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8월(1만6821명·26.6%)과 9월(1만6085명·25.5%)에 많이 발생했다.

벌쏘임 환자 연령대는 50대(27.1%), 60대(23.5%), 40대(15.4%), 70대(10.6%) 등의 순으로 많았다. 지역적으로는 경기(9897명)가 가장 많았고 비교적 도심이 많은 특·광역시에서 다소 낮게 발생했다.

최이슬기자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하나... 검토중

정부는 24일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 조치의 유지 및 폐지 가능성에 대해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박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이 입국 전 검사 조치의 단계적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 당국도 이를 검토 중이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에 대해 조건부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에 받은 음성확인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도 현재 입국 전 48시간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는 입국 3일 내였던 PCR 검사 시한을 1일 내로 강화했는데, 여행업계와 관광객들을 중심으로서는 이러한 조치가 불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반장은 “정부와 방역 당국도 모두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며 “(이 문제는)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비행기를 통한 여행은 밀폐된 공간 안에서 식사 등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세부적인 진행 상황은 질병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

30대 엄마, 2세 자폐증 아들 살해 후 극단적 선택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들을 살해 후 30대 엄마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24일 대구 달서경찰서,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9

시15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A(32·여)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자폐증을 앓고 있던 아들 B(2)군을 살해한 후 이 같은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는 유서

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비기자